

북, 고위급회담 당일 연기 배경은

명분은 '맥스선더 훈련'... 속내는 핵협상 살바싸움

〈한미연합공중훈련〉

통일부, 일방적 연기 통보에 '유감' 평화·변영 위해 조속한 호응 촉구

통일부는 16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날로 예정된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이날 발표한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측이 남북고위급회담 일지를 우리측에 알리는 직후, 연례적인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4월 27일 양 정상 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근본정신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북측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조속히 회담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북측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



북한이 한·미 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을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을 전격 취소한 가운데, 16일 오전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 활주소에 미군 F-22 랩터가 착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도 남북간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

을 통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과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유관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 개요

연례적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주관: 공군작전사령부와 주한 미 7공군사령부

올해 훈련기간: 5월11일~25일(2주간)

공중전력 동원 규모

F-22 스텔스 전투기 8대, F-15K F-16

전투기 등 100여 대의 양국 공군 전력 참가

올해는 B-52 장거리폭격기를 동원하지 않음



장거리폭격기 B-52

길이 / 폭 / 높이 48m / 56.4m / 12.4m

최대 속도 마하 0.95

최대 항속거리 1만6,000 km

탑승인원 6명

특징 및 주요 탑재무기

· 미 공군 주력 장거리폭격기

· 핵탄탄, 정밀유도탄과 공중

발사 순항미사일 등

최대 271 탑재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일 중으로 (북측에) 통지문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판문점 연락채널 등을 통해 남측에 한미연합훈련이나 맥스선더 훈련을 거론한 적이 있는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새벽 0시 30분께 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한미 공군의 연례적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를 문제 삼아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맥스선더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맥스선더'(Max Thunder)는 2009년부터 시작된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으로 매년 5월 열리는 훈련에는 F-15K와 F-16 등 한미 공군의 전투기 100여 대가 참가해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정 빠듯' 국회 추경... 졸속심사 우려

드루킹 특검법안 여야 이견도

국회가 16일 청년 일자리 및 지역경제 지원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3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여야가 추경과 드루킹 특검법을 오는 18일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를 앞으로 다가온 추경 처리 시점을 두고 일부 반발이 있는 데다, 특검 규모와 수사 기간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일정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사의 막을 올렸다. 또 정무위, 기획재정위, 환경노동위 등 관련 상임위도 일제히 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 추경안을 심의했다.

예결위와 상임위의 추경안 심사가 동시에 진행된 것은 '18일 본회의 처리'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상임위 예비심사 후 예결위 심사'라는 통상의 절차대로 할 경우 '18일 처리'가 어렵다고 본 것이다.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을 상임위 예비심사 시한으로 지정한 상태로 예결위 소위 진행 시까지 상임위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상임위 단계를 건너뛸 수 있다.

예결위는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18일 오후 9시로 잡혀있는 만큼 그전까지 추경안을 의결해 넘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날 종합집의를 완료하고 17일 소위를 통해 증·감액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18일 처리에 반대하며 추경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고, 다른 당 일각에서도 '졸속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실제 추경안 심사 및 처리가 당초 여야 합의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위원장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경우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다가 바로 산회하기도 했다. 산업위 소관 부처에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지원 등 이번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1조9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배정돼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추경안 심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야당 간사인 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국회의장이 상임위 예산심의권을 박탈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심사를 거부해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추경 관련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아직 회의 일정도 안 잡혔다.

나아가 추경이 특검법과 연계돼 있다는 점도 변수다. 여야는 드루킹 특검의 명칭과 추천 방식, 수사 대상은 합의했으나, 특검 규모나 수사 시기 등 세부사항에서는 계속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특검' 수준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곡동 특검법은 특검보 2명, 특별수사관 30명, 파견검사 10명 등이 30일(1회 15일 연장가능) 수사하도록 했고, 최순실 특검법은 특검보 4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검사 20명 등이 70일(1회 30일 연장가능) 수사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美 국무부 "북미정상회담 준비는 계속"

남북고위급회담 연기 영향 없어 합동훈련 도발적 행위 아니 일축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을 비난하며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번 발표가 현재까지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헤더 나이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으로부터 입장 변화를 "동보받은 게 없다"면서 "우리는 (북미 정상)회담 계획을 계속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나이트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 정부 또는 한국 정부로부터 이 훈련을 계속 수행하지 말라거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계획을 계속하지 말라는 의사를 내비치는 어떤 것도 들은 게 없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남조선에서 무분별한 북침전쟁 소동과



오는 6월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합성 사진. /연합뉴스

대결 난동이 벌어지는 협박한 정세 하에서 16일로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면서 "남조선 당국은 미국과 함께 남조선 전역에서 우리에게 대한 공중 선제타격과 제공권 장악을 목적으로 대규모의 '2018 맥스선더' 연합공중전투 훈련을 벌여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이트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이 이번 맥스선더 훈련을 도발 행위로 비난한 데 대해 "그 훈련들은 도발적이지 않다"고 일축했다.

특히 그는 "김정은(위원장)은 이전에 한국과 미국이 합동훈련을 계속할 필

요성과 유용성에 대해 이해한다고 말했다"면서 "우리가 근거로 삼는 것은 김정은이 이전에 미국과 한국이 하는 이러한 합동훈련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정한다고 말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훈련들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많은 동맹국과 하는 것이고, 수십년간 해온 일들"이라며 "김정은은 우리가 합동훈련을 계속하는 것이 미국에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나이트 대변인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북한에 남북고위급회담을 완수하라고 권할 것이냐는 질문에 "장관이 전화를 걸어 현 시점에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라고 애걸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나이트 대변인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의 인준이 북미 정상회담 날짜인 6월12일 이전에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능한 최대한 빨리 한국 대사를 갖길 원한다"면서도 "상원에 물어보라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北 김계관 "핵포기 강요하면 북미정상회담 재고려"

리비아식 핵포기·완전폐기 등 상대방 자극하는 망발이라 지적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16일 자신들의 일방적인 핵포기만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으며 내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에 응할지 재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제1부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를 통해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조미(북미)수뇌회담에 응하겠다는 것을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조미 관계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조미수뇌회담에 나오는 경우, 우리의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이번 담화가 미국 정부의 태도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제1부상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미국 고위관료들이 '선핵포기 후 보상' '리비아식 핵포기방식' '핵·미사일·생화학무기 완전폐기' 등을 밝히고 있는데 대해 "대화 상대방을 심히 자극하는 망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대국들에게 나라를 통째로 내맡기고 붕괴된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심히 불순한 기도의 발현"이라며 "핵개발의 초기 단계에 있던 리비아를 핵보유국인 우리 국가와 대비하는 것 자체가 아둔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서 리비아를 모델로 한 일괄 타결방식이 거론되고 일방적인 북한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연합뉴스